

# 여야, '김민석 청문회' 격돌... 시작부터 고성·막말

증인 채택·자료 제출 등 놓고 충돌  
민주 "범죄자 취급...개인사 몰고 가"  
국힘, 재산·아들 의혹 등 파상 공세  
김 "총리직, 제 정치 마지막 생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검증 사항을 두고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묻지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치러지게 된 것을 두고도,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 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간사는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채택하면 되는데 이종배 위원장께서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것으로 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고발도 당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검찰 고발은 국민의힘이 한 것이다. 그걸 수사자가 착수된 것인 양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데,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라며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양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내용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 간에는 의혹 제기와 상호 공격성 발언이 이어지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2018년도에 1억4000만원의 돈거래 한 것을 7년 동안

변제를 하지 않다가,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니까 총리로 지명된 다음에 채무 변제를 했다"면서 "변제를 했으면 상환한 계좌 내역, 또 대출로 상환했다니까 대출 내역 등이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의 미국 코넬대 유학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 스스로 전 배우자가 전액을 냈다고 해명했다"며 "그래서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환 신고 내역 없다'이다. 도대체 학비랑 생활비는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의석에서는 "프라이버시다", "인권 침해다"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말발하고, 박 의원이 "미친 것 아닌"라고 항의했다가 뒤늦게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사청문회도,

신상을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사람의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어 "이 자리가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검사가 뜨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서 선입관을 갖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금 출처,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박규택 의원이 '정치인 출신 지명자라면 총리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한 번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묻자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총리)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주철현·조계원 "여수 산단위기, 정부 특단조치" 촉구

전라남도 여수시를 지역구로 둔 주철현·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장기 불황과 구조적 위기로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 조치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여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구조재편 주도를 약속했고, 올해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여수와 같은 산업도시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정부가 그 약속을 책임 있게 실현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수의 고용 위기지역 즉각 지정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리시 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과징금 및 징벌적 행정조치 재검토 △석유화학산업 고부가 가치 전환 및 국가 주도의 산업재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지금 여수를 살리지 않으면 내일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수지와 형식 너머에 있는 산업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물가 TF 출범 "물가안정 특단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생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내란 위기에 중동 정세까지 더한 복합적 위기로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 민생 회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국회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 간, 관계 부처 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TF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으로 출범한 원내 TF다. TF에는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부대표, 이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소영·김동아·안태준·임광현·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정기획위, 공수처 권한·기능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한·기능의 확대,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는 논의가 검찰개혁의 틀 안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역할 제고 방안 등

을 상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기능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검사·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거나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 李, 공직자 책임의식 강조... 취약계층 배려 주문도

"6·25 희생 치른 분에 충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얘기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담 같은 얘이지만 손오공 얘기, 서유기를 다들 어릴 때 보셨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든 마녀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며 "그러면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더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달라"며 "그런 책임감

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내일은 6·25 전쟁 75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며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할 텐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車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유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엔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서울=김선욱 기자